

먹거리정책의 나아갈 바, 식량주권

전여농 여주시여성농민회 임은주

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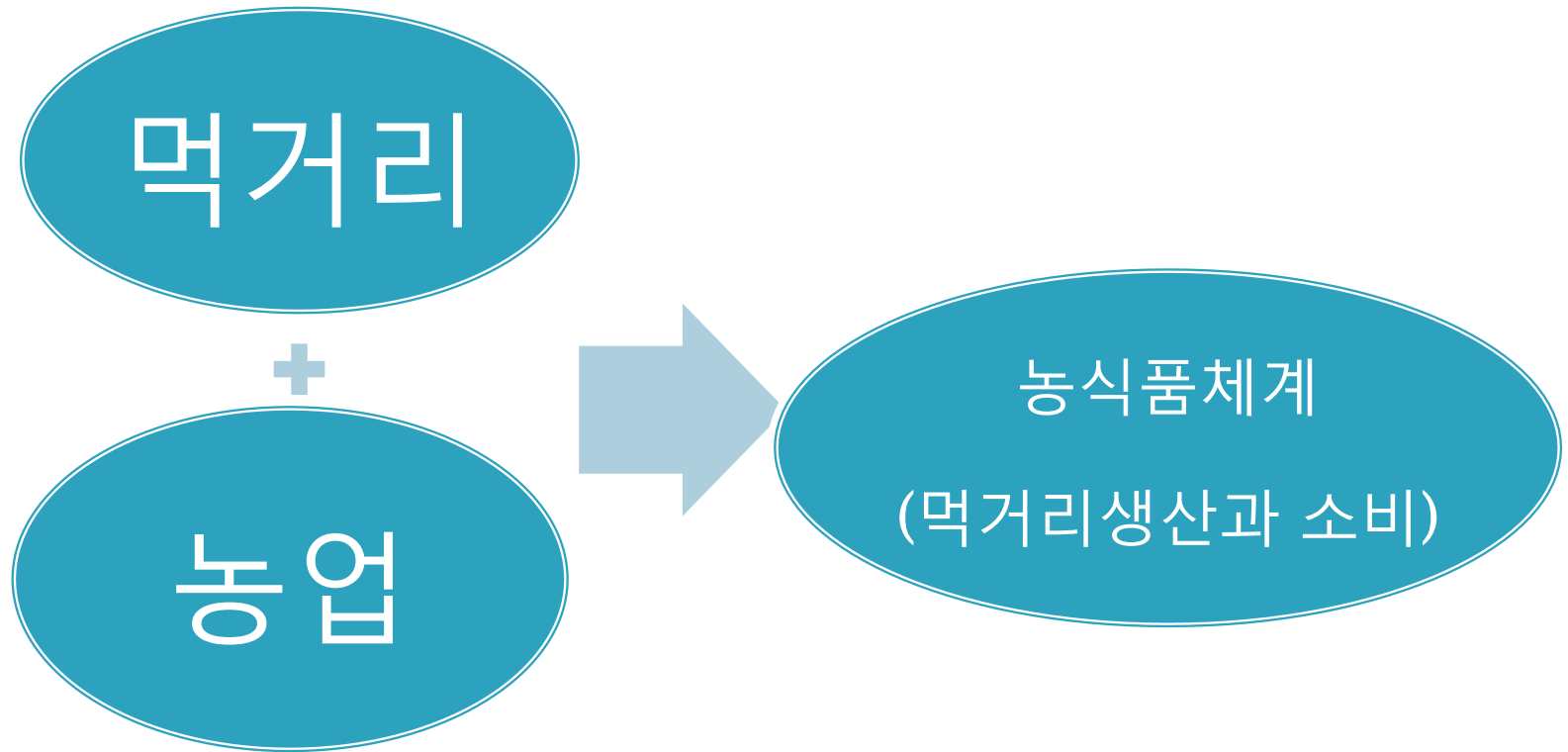
예전에는 먹고 입고 쓰던 물건들을 대부분 스스로 생산하였다.

사회적 과정으로서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누구는 논이나 밭에서 농사만 짓고 누구는 공장에서 기계만 돌리면서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살 수 있게 되었고 농업과 공업, 도시와 농촌이 분리되었다.

사회적으로 분화되고 공간적으로 분리된 농과 식은 개인들을 파편화시켰다.

농민은 시장에서 농산물(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로, 소비자는 농산물(먹거리)에 적극적인 개입을 못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되었다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농업과 먹거리는 두 개의 분리된 영역이나 단절된 활동이 아니다.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먹거리의 출발점으로서 농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농업의 결과물인 먹거리 문제에 대해 신경 써야 한다.

UR(우루과이라운드, 1986~1993)

상품무역만으로 한계를 느낀 미국이 시장을 확대시킴,
2차 산업의 공상품위주의 시장을 1차 상품인 농축수산물, 3차 상품인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여 협상을 타결시킴.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상징이 됨

WTO(세계무역기구, 1995년 출범)

그 동안 협정에 불과하여 강제가 불가능했던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WTO로 편입되면서 강력한 국제무역질서의 기준이 됨. WTO에의 제소가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무역 분쟁은 강제가 가능한 규범이 됨

우리 농업과 관련된 무역협정

FTA(자유무역협정, 양자간협상)

2001년 WTO하의 최초의 다자간 협상인 DDA(도하개발아젠다)가 카타르에서 시작되었으나 각국의 이익을 지키려 하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 개별국가간의 양자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음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모든 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어 당사국의 협상에 따라 개방의 정도를 조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 참여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일본,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의 결과

- ▶ 한국농업농촌농민의 해체
- ▶ 초국적 농식품복합체에 의한 세계농식품체계의 강화
- ▶ 가공,유통에서 종자로
- ▶ 무너져 버린 한국의 종자산업

1990년

- 농가인구 비율 15.5%
- 식량자급률 43%
- 국내총생산가운데 농림어업비율 8.4%

2006년

- 농가인구 비율 6.8%
- 식량자급률 27.7%
- 국내총생산가운데 농림어업비율 3.3%

2015년

- 농가인구 비율 5.1%
- 식량자급률 23.8%
- 국내총생산가운데 농림어업비율 2.3%

Ⅲ. 인구 및 가구

연도별 인구 및 가구

연도	총 인구				농촌 인구								
	총인구		%		농촌인구								
	천호	천명	증가율	가구당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70	5,857	32,241	2.21	5.4	-	-	-	-	-	-	-	-	-
75	6,754	35,281	1.70	5.1	17,910	2,390	1,444	1,224	2,345	1,873	2,945	3,142	
80	7,969	38,124	1.57	4.6	16,002	2,554	1,212	972	2,184	1,610	2,555	2,669	
85	9,571	40,806	0.99	4.2	14,006	2,581	1,003	825	1,965	1,257	2,254	2,152	
90	11,355	42,869	0.99	3.8	11,102	2,078	797	684	1,546	926	1,740	1,703	
95	12,958	45,093	1.01	3.5	9,572	1,775	648	612	1,301	724	1,282	1,523	
00	14,391	47,008	0.84	3.3	9,381	1,914	611	603	1,250	637	1,183	1,408	
02	15,110	47,645	0.58	3.15	-	-	-	-	-	-	-	-	-
03	15,434	47,892	0.52	3.10	-	-	-	-	-	-	-	-	-
04	15,732	48,083	0.40	3.06	-	-	-	-	-	-	-	-	-
05	15,988	48,185	0.21	3.01	8,764	1,877	570	553	1,186	544	1,028	1,400	
06	16,322	48,438	0.53	2.97	-	-	-	-	-	-	-	-	-
07	16,602	48,684	0.51	2.93	-	-	-	-	-	-	-	-	-
08	16,883	49,055	0.76	2.91	-	-	-	-	-	-	-	-	-
09	17,168	49,308	0.52	2.87	-	-	-	-	-	-	-	-	-
10	17,575	49,554	0.50	2.82	8,758	1,962	552	574	1,228	506	1,173	1,207	
11	17,879	49,937	0.77	2.79	-	-	-	-	-	-	-	-	-
12	18,119	50,200	0.53	2.77	-	-	-	-	-	-	-	-	-
13	18,388	50,429	0.46	2.74	-	-	-	-	-	-	-	-	-
14	18,705	50,747	0.63	2.71	-	-	-	-	-	-	-	-	-
15	19,561	51,015	0.53	2.61	9,392	2,142	597	639	1,171	537	1,017	1,240	
16	19,285	51,246	0.45	2.66	-	-	-	-	-	-	-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과, 농어업통계과

(2) 식량자급도

○ 전체곡물 자급도

(단위 : %)

연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75	73.0	94.6	92.0	5.7	8.3	85.8	100.0	100.0
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85	48.4	103.3	63.7	0.4	4.1	22.5	100.0	11.6
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95	29.1	93.6	67.0	0.3	1.1	9.9	98.4	3.8
00	29.7	102.9	46.9	0.1	0.9	6.8	99.3	5.2
01	31.1	102.7	77.2	0.1	0.8	7.7	99.1	11.1
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03	27.8	97.4	49.8	0.3	0.8	7.3	98.1	12.5
04	26.9	96.5	54.1	0.4	0.8	7.1	97.1	7.5
05	29.3	102.0	56.4	0.2	0.9	9.7	98.6	10.8
06	27.7	98.5	41.7	0.2	0.8	13.6	98.5	10.3
07	27.7	95.8	51.2	0.2	0.7	11.2	98.4	10.0
08	27.8	94.3	38.6	0.4	1.0	8.6	98.3	8.1
09	29.6	101.1	45.4	0.5	1.2	9.9	98.7	9.6
10	27.6	104.6	24.7	0.9	0.9	10.1	98.7	10.0
11	24.3	83.1	22.5	1.0	0.9	8.0	96.9	8.7
12	23.7	86.6	16.5	0.7	0.9	10.4	95.8	10.0
13	23.3	89.2	19.3	0.4	1.0	9.7	96.3	11.1
14	24.0	95.7	24.8	0.6	0.8	11.3	96.1	11.8
15	23.8	101.0	21.9	0.7	0.8	9.4	94.6	11.8
16(P)	23.8	102.5	23.3	0.9	0.8	7.0	94.8	11.9

자료 :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주 : 양곡년도(전년 11월 1일부터 당년 10월 31일까지) 기준임.

세계농식품체계의 문제점

▶ 산업형농업(녹색혁명형 농업)

1. 영농과 유통에서 농민들의 높은 의존도
2. 농민의 자율성 저하
3. 식품안전에 부정적으로 작용
4. 농업에 유전자 조작 종자 사용
5. 농민 몫의 저하

▶ 식량체계에서 식품산업의 지배

1. 식품산업은 소비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
2. 이윤을 위해 세계시장을 활용
3. 신선식품보다 냉동, 가공식품을 보급
4. 소비자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환상

▶ 먹거리 공공성 약화

1. 식품산업이 먹거리의 공공성을 탈취
2. 특허/지적재산권을 이용하여 농업, 생명자원의 공공성을 탈취

▶ 저가 수입농산물의 범람

1. 저가 수입농산물의 경우 생산, 유통과정에서 농약, 방부제 등이 많이 사용
2. 수입농산물 선호는 국내 농업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킴
3. 우리나라 농산물로 만드는 음식, 음식문화의 발전에 장애

식량주권 개념의 등장

- ▶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비아캄페시나는 먹거리를 최우선적 기본권으로 하는 식량주권의 원칙을 제출
- ▶ 식량주권의 7대원칙
 1. 먹거리는 인간의 기본권
 2. 농지개혁
 3. 자연자원보호
 4. 먹거리 무역 재편
 5. 굶주림의 세계화 종식
 6. 사회적 평화
 7. 민주적 통제

먹거리의 새로운 틀, 식량주권

식량안보	항목	식량주권
모든 것의 자유무역	무역	먹거리는 자유무역에서 제외
시장에서의 가치	생산 우선권	지역, 자국의 먹거리 보장
저비용, 고효율	농산물 가격	농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가치 포함
세계-국가-지역 시장의 연결	시장 접근	지역, 자국 시장 우선권
규모화, 수출농업의 기반	보조금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보조금, 농민직거래, 가격지지, 생산기반 및 환경보존
상품	먹거리에 대한 시각	기본권
경제의 효율을 위한 선택	생산, 소비 권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생산, 소비공동설계의 권리와 책임
낮은 생산력	굶주림의 원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과 분배,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
저비용 수입, 저비용 공급	먹거리보장	자국의 농민과 생산기반에 의한 생산, 유통, 소비 선수
인정하지 않음	과잉생산	공급 관리 정책의 필요
문제없음	덤핑과 독점	독점은 문제의 근원이며 덤핑은 금지되어야 함

식량주권 실현방안,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지역먹거리체계의 필요성

- ▶ 안전한 먹거리의 대안
- ▶ 생산자 농민의 보호와 지원
- ▶ 시장유통체계의 대안 마련

식량주권 실현방안,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지역먹거리체계의 개념

- ▶ 지역먹거리체계(Local Food System)는 지역산 먹거리(농산물, 가공식품, 조리음식)를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한다.
- ▶ 지역먹거리체계는 생산자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 ▶ 지역먹거리는 국경기준이 아니어서 WTO나 FTA의 공세를 피할 수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지역산’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이미 전제된다.
- ▶ 국가별로 조건과 상황이 다르기에 국가별 각각의 특성이 있다. .

식량주권 실현방안,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지역먹거리체계의 의의

- ▶ 새로운 사회경제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 ▶ 국민합의의 농정이 전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 ▶ 국민과 농민의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연대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

식량주권 실현방안, 지역먹거리체계 구축

지역먹거리체계의 사회경제적 효과

- ▶ 농민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며 새로운 창출되는 부가가치가운데 농민의 몫이 증대된다
- ▶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의 먹거리안전과 건강소비를 실현하고 농업의 이해당사자로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다
- ▶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질병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 ▶ 이산화탄소 및 대기오염 물질 방출을 줄이고 소비자-생산자관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행을 촉진한다
- ▶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활동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 ▶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소비하는 먹거리의 생산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가치교육 및 먹거리-생태교육이 가능하다.

지역먹거리체계의 효과

영역	효과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가능, 지역농업 정립
건강 및 보건의료	식원성 질병(비만, 아토피 등)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유지
환경	농촌환경과 도시환경의 개선, 농업 생물 다양성의 증진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
지역사회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농사체험, 생태교육, 학교급식, 먹거리 교육의 연계
사회복지	저소득층의 먹거리 보장과 중소농 소득보장의 연계
문화	농산물, 음식, 요리의 지역성, 전통문화 확대

지역먹거리체계의 정책방향

▶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정책방향

- ▶ 자주적인 생산공동체와 소비공동체가 먹거리를 매개로 자발적으로 사회경제적 연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심축이며 여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체계가 결합되어야 한다.
- ▶ 생산공동체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지역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공동체는 지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의무를 가지며 공동으로 먹거리 안전과 환경보전, 지역공동체 유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 ▶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농업을 회생시키고 먹거리 안전, 먹거리 선택권, 먹거리 복지 등의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 ▶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으로 단작화, 화학농업의 폐해를 줄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농업생물다양성이 보존되어야 한다.